

2025년 정부 예산안은

김건희·윤석열 예산농단 을 입증하는 증거물이다!

- 예산농단에 부역하는 기재부는 검찰처럼 권력의 애완견이 되려고 작정했는가-

□ 2025 정부 예산안의 본질은 ‘예산농단’ - 5대 증거

1. 예측 빙하기 3년째 상승적인 분식회계 예산안
2. 대규모 세수평크에도 ‘빚 안낸다’더니 내년 적자국채 86.7조원 발행.
거짓말 실토 예산안
3. 차기정부 재정여력도 갇아 먹는 몰염치 예산안
4. 재정 건전성과 재정 책임성을 동시에 상실한 후안무치 예산안
5.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예산안

조국혁신당, 예산농단 끝장내는데 맨 앞에서 싸울 것

1.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면, 2025년 예산안은 기재부가 ·尹 예산농단의 주범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입증할 것
2. 이를 통해 기재부 개혁 필요성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토록 할 것임.
3.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망치고 있는尹정부 하루빨리 탄핵해야

□ 조국혁신당은 건회예산, 특활비, 정부재량 예비비 깎고 尹이 내팽개친 사회권 선진국 향한 민생예산 증액에 전력할 것임

<감액 사업>

① 조국혁신당 역점

- ①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640억 원 삭감
- ② 폭증한 예비비 6,000억원 삭감
- ③ 원전관련 R&D 예산 2,000억 원 가량 삭감
- ④ 실패한 외교, 안보위기 조장외교 관련 예산 삭감
- ⑤ 원전산업 특혜 예산 삭감
- ⑥ 재정운용 원칙 파기 예산 삭감

② 협력

- ① 건회예산 전액 삭감 등 - 개삭용(544억), 마음투자(430억), KTV 관련, 김 라인 지원예산
- ② 11.1% 폭증한 검찰 및 법무부 특수활동비 122억원 전액 삭감
- ③ 대왕고래 예산 497억원 등

<증액 사업>

①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민생예산

- ① 주거권 : 감액된 임대주택사업의 정상화, 2.5조원 증액
- ② 환경권 : 기후위기 대응예산 1,845억원 증액
- ③ 노동권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근로환경 취약계층 예산 3,708억원 증액
- ④ 건강권·돌봄권 : 상병수당, 간병지원 등 690억원 증액
- ⑤ 교육권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원상복구 (약 9,386억원 증액 필요)
희망사다리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 (약 45억원 증액 필요)
- ⑥ 디지털권 : ‘ 디지털 포용 사회 ’ 실현을 위해, 약 236억 증액 필요
- ⑦ 문화권 :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맘 편히 창작할 수 있도록 약 659억원 증액 필요

② 국민주권 : 영토주권수호를 위한 독도관리 예산조차 삭감. 21억원 증액

③ 민생

- ① 비정한 정부, 에너지바우처 예산 삭감, 1,842억원 증액 필요
- 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예산 삭감, 5,000억원 이상 증액 필요

< 2025 정부 예산안의 본질은 “예산농단”- 5대 증거 >

1

국세수입 예측치 뺄뺄기 3년째. 상승적인 분식회계 예산안
- 4.5%성장에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무려 11.7%증가한다고 뻔한 거짓말 반복한 尹정부

23 56조, 24년 30조원 등 2년 연속 세수펄크 발생. 이는 정부예산안 국세수입이 실현불가능한 예상치였다는 것을 의미. 문제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것임.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달성불가능 수치로 3년 연속 세수펄크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임

- 국세수입 예산 382.4조원은 올해 예산안(367.4조원)에 비해 15조원 4.1%, 실 징수액(337.7조원)에 비해 44.7조원, 11.7%증가한다는 예측임
- 감세로 인해 매년 국세수입액이 줄어들고 있음. 특히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등의 추가감세를 통해 향후 5년간 18.4조원의 국세수입을 더 줄이겠다고 발표.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국세수입이 무려 11% 넘게 증가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음
- , 세수 결손을 일으킨 주요 세목은 법인세인데 정부는 내년 법인세 세수를 88.5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올해 실적(63.2조원, 세수채추계기준)보다 무려 40% 많은 수치임. 그러나 올 하반기 법인 실적이 좋지 않아 내년도 결손 우려

<표 1> 비현실적인, 습관적인 정부의 국세수입 과다 예측 내역

	정부재출 국세수입 예산안(A)	국회 국세수입 확정안(B)	국세수입 징수액(C)	A-B
22년	338.6조원	396.6조원*	395.9조원	-0.7조원(B-C)
23년	400.5	400.5	344.1	-56.4
24년	367.4	367.3	337.7**	-29.6
25년	382.4조원			

* 본 예산+ 추경을 모두 반영한 금액 ** 24.12월 예정치, 24.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1.3조원 감소한 255.3조원 징수

- 3년 연속 이같은 기재부의 분식회계는 세수를 과잉예측해서 감세가 아무 문제 없다는 정치적 거짓선동에 부역하는 것에 불과함
- 반면 기재부는 민주당 정부 집권기에는 세수 과소예측으로 재정확대의 싹을 잘라왔음. 반면, 2022년 대통령 집권직후 초과세수 53조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틀 만에 추경을 만들어 지출을 확대하였음.



방지의 유일한 길은 윤석열 정부 추가감세 저지, 기감세 정상화임
세수예측은 정확도가 생명, 정치적 고려의 개입으로 정확도 포기하는 예산농단임

2

대규모 세수펄크에도 ‘빚 안낸다’더니 내년 적자국채 86.7조원 발행
거짓말 실토 예산안

채권금리 상승 촉발로 시중금리 상승요인 작용 자명. 국민 금리부담 가중

- 尹 정부는 추경·국채발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 20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 국채 규모도 86.7조 원에 달해
 - 내년도 국고채 발행규모는 201조 원으로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보다 14조 원 많고, 순 발행 물량도 올해보다 33.8조 원 늘어
 - 시장 예측을 상회하는 국채발행 규모로 채권금리 상승 우려,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되지 않았더라면 시장에 큰 영향 미쳤을 가능성

<표 2> 국고채 발행 현황 (조원)

구분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실적	'24계획	'25년 정부안
발행한도(추경 포함)	186.3	177.3	167.8	158.4	201.3
총발행	180.5	168.6	165.7	158.4	201.3
▪ 순발행	120.6	97.3	61.5	49.9	83.7
▪ 차환발행	59.9	71.4	104.2	108.5	117.5

자료: 기획재정부

- 특히, 공자기금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예탁) 금액인 적자국채는 내년 86.7조 원으로 코로나 위기 한복판이었던 2021년 수준에 육박하는 규모
-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경 없이 기금으로 돌려막기 한 결과로 尹 정부의 ‘빚 안낸다’는 선언은 사실상 조삼모사에 불과한 측면이 있음

<표 3>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적자국채) 규모(조원)

'21		'22		'23		'24.10		'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실적	예산안
97.8	88.2	91.2	86.2	55.4	55.4	81.7	81.7	86.7

자료: 기획재정부

- ☞ 민생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음에도 추경과 국채발행은 없다더니, 조삼모사에 불과했던 것, 오히려 제때 추경을 하지 않아 민생 어려움만 가중시켰음이 드러나

3

차기정부 재정여력도 얇아 먹는 물염치 예산안

- 차기 정부에 △100조 원의 부담을 떠넘기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까지 망치려고 해

- 감세 정책으로 다음 정부에서 △100조 원의 세수 감소, 어려운 여건서 재정여력 남겨준 文정부(6.8조 원)와 비교하면 尹정부 무책임 극명해
 - 정부에서 발표된 3번의 세법개정안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인한 임기 내 △83.7조 원, 임기 후 차기 정부에서 △100조 원 발생
 -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382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에 떠넘긴 △100조 원의 세수감소 효과는 재정운용에 큰 차질을 초래
 - 2025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망치는 예산안임

<표4> 윤석열 정부 연도별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효과 (누적법, 억 원)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					누적 소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4 세법개정안			-6,227	-38,833	-3,888	8,756	-3,323				-183,942
23 세법개정안		-7,546	1,778	241	-269	1,077					-29,356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		-44,307	22,800	-	-	-					-130,335
22 세법개정안	-64,096	-74,310	1,225	5,173	616						-603,083
연도별 누적합계	-64,096	-190,259	-170,683	-204,102	-277,643	-197,810	-201,133	-201,133	-201,133	-201,133	-946,716
정부별 누적 합계	-836,783					-1,002,342					

자료: 조국혁신당(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연구용역)

-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6.8조 원의 재정 여력을 남겨주었다는 점에서 윤 정부의 무책임 극명히 드러나
 -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비판을 감수하며 세목을 신설하고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임기 내 9.9조 원, 임기 후 6.8조 원의 세수증대 효과

☞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차기 정부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4

재정 건전성과 재정 책임성을 동시에 상실한 후안무치 예산안

인한 재정건전성 실종 : 2025년 관리재정수지 -77.7조원

- 2025 정부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는 -77.7조원임. GDP 대비 약 -2.9%임.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시 GDP 대비 -2.9%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기록한 적은 없었음
 - 2025년 예산(677조원)이 예측 명목성장률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3.2%증가에 그친 건축재정에도 건전재정에 실패한 이유는 감세 탓임. 기재부 자료로 윤석열 정부 감세효과가 2025년 국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약 -17조원으로 감소함
 - 특히 2025년 국세수입 382조원은 22년 국세수입이 396조원에도 못 미침. 그동안 경제성장률은 저조해도 물가가 많이 올라 경상성장률은 매년 4% 내외 성장했음. 국세 수입에 상관관계가 큰 경상성장률은 성장했는데 국세 수입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지 않은 2022년도보다도 적은 이유 역시 감세 때문임

□ 재정건전성을 희생하고 재정건전성 지표만 관리

- 25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한 지출은 건설보상비(-14%)와 지분취득비(-77.8%)임. 건설보상비는 토지 및 건물의 매입 비이며, 지분취득비도 토지매입을 위해 민간에 지원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로 자본적 지출임
 - 이러한 자본적 지출 금액을 줄이면 기획재정부 총지출 통계상 지출 금액이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감소함. 반면, 적자규모가 감소하는 것만큼 경제적 실질측면에서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 이번 정부에서 출자금, 유형자산 매입 등을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관련 지출을 증가해야 할 일이 발생하며, 특히, 이번 정부에서 융자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면 다음 정부의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하여 다음 정부의 재정수지는 악화될 수 있음.

재정책임성 실종 : 물가상승률(2.5%) 보다도 낮은 재량지출 0.8% 증가에 그쳐

- 내년 예산 중 재량지출 비중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 가장 큰 폭 감소, 서민 피해 현실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는 무려 16.8조원↓

☞ **재정의 건정성·책임성 포기하고 건전성 지표만 관리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최대 목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尹정부 무책임의 극치를 증명. 내수불황을 부채질**

5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예산안
-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 교부금 임의삭감

발생하자 정부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임의삭감

- **올 9월 세수 재추계에서 밝혔던 29조 6천억 원의 국세 수입 부족 해결을 위해 국회에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보고**
 - 약 4조 원, 외국환평형기금 4~6조 원, 주택도시기금(주택청약통장) 2~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약 3조 원 등 모두 16조 원 안팎을 활용하겠다고 밝힘.
 - 결국, 기재부는 ① 예산집행 안하고(안쓰고), ② 지방에 돈 안주고(지방교부금) 그리고 ③ 기금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땀겨 써서 대응하겠다는 것
-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 명시된 ‘필요’ 한 경우, 혹은 ‘여유’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량으로 정부 내 가용재원을 전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기재부의 ‘초(超)재량적’ 예산 운용임
 - 현재의 환율추이나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외환보유고 잔고가 지금은 4100억 달러 이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잠시 전용해도 괜찮다는 기재부의 판단은 무책임
 - 주택기금은 국민들이 주택청약을 위해 마련해 놓은 저축의 집합임. 이를 기재부가 재량껏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자신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것. 더 많은 주택기금을 기재부 맘대로 갖다 쓰기 위해 올 11월부터 납입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5배 증가시킨 것이냐는 국민적 의심에 자유로울 수 없음
- 한편,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교부세, 교부금을 정부가 임의 삭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
 - 정부 논리는 지방교부세는 국세와 연동(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20%)되는데 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도 줄여야 한다는 것임.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와 연동되는 것은 맞음. 다만 정산 시점이 문제
 - 올해 내국세 세수결손의 정확한 금액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2025년에 진행되는 2024년 결산 때임. 따라서 중앙정부가 2026년에 줘야 할 교부세(금)에서 2024년 세수결손분만큼 제하고 주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

- 특히, 추경도 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한 본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계획된 교부세를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임
- 국회가 확정된 교부세 및 본예산을 추경이라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임의로 삭감하면 국회가 심의, 확정된 예산안의 불확실성이 발생해 정부 예산안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국가 전체적으로 신뢰의 위기가 발생하게 됨. 지난해 국회가 심의, 확정된 예산에 따른 교부세 금액만큼 지방정부는 세출을 편성하고 11월 현재 상당부분 집행까지 완료한 상태임



법적근거없는 교부세, 교부금 임의삭감이라는 국회 예산 심의, 확정된 침해라는 예산농단으로 인해 국가 경제 전체의 신뢰위기에 직면할 상황까지 이를

**[] 조국혁신당은 건희예산, 특활비, 폭증한 예비비 깎고,
尹이 내팽개친 사회권 선진국 향한 민생예산 증액에 전력할 것 !**

① 조국혁신당 역점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증액분 527억원 삭감

- 안보비 포함 1조 1,600억원에서 2025년 1조 2,100억원으로 527억(4.5%) 증액 특수활동비 감액 추진이 중단되는 것을 저지. 감사원 특활비 8억원 전액 삭감

폭증한 예비비 6,000억원 삭감

- 올해 42조원에서 2025년 4.8 원으로 14.3% 폭증한 예비비 삭감. 국회 심의없이 정 부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최소화. 국회 예산 심의, 확정권 강화

③ 원전관련 R&D 예산 1,000억 원 이상 삭감

- 2024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뒤 2025년 다시 증액해 R&D총액은 2023년 수준 회복. 그러나 2024년 삭감 R&D는 대부분 삭감된 상태가 유지되고 2025년 증액된 R&D는 별개의 새로운 R&D가 증액되었음. 대표적으로 원자력 관련 R&D 약 2200억 원 증액됨

실패한 외교, 안보위기 조장외교 삭감

- NATO 신탁기금 175억원, 한일국교 60주년 3.78억원,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증액한 CDA 예산 2,436억원

⑤ 원전산업 특혜 예산 삭감

-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98억원 및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 500억원 삭감

⑥ 재정운용 원칙 파기 예산 삭감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3,293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삭감을 정상화시켜 보통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② 민주당과 협력

① 건희예산 삭감

- 개식용 관련 예산 504억원 전액 삭감, 마음투자 사업 508억원 전액 삭감
- KTV 방송제한관 실제 10억원 전액 KTV 방송프로그램 제작감축회 황재관 예산 53억원 중 30억원
- 감건희 라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유형서 부원장,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감종류 이사장 예산 각각 50% 삭감

② 11.1% 폭증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 전액 삭감

- 민생예산 짝퉁 건축재정에도 올해 72억원에서 2025년 80억원으로 11.1% 증액

③ 대왕고래 예산 삭감 - 유전개발사업출자 497억원 전액 삭감

[증액사업]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민생예산 증액, 국민주권 회복 !

1 사회권 선진국 관련

① 주거권 : 내년 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 약 40% 감소,
24년 수준으로 증액하여 서민 주거 안정 필요, 약 2.5조 원 증액

□ 주택 부문은 24년 37.4조원에서 25년 35.6조원으로 총 3.5조원이 증액되고 5.4조원이 감액되어 1.8조원(-4.9%) 순감하여 복지 분야 중, 25년도 가장 많이 감소된 부문

- 특히, 금액이 지속해서 감액된 프로그램은 임대주택지원(출자) 사업이 4년간 57.1%, 임대주택지원(융자) 사업이 4년간 20.3% 큰 규모로 감액했음

- 임대주택지원(융자)사업과 임대주택지원(출자) 사업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2.5조원 증액 필요 (임대주택지원(융자)사업 약 4.4천억(439.108 백만원) 증액, 임대주택지원(출자) 사업 약 2조원 (2,088,009 백만원) 증액 필요

② 환경권 : 감액된 기후위기 대응 예산, 1,845억 원 증액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예산은 공정한전환·기후변화대응·대기환경 보전 온실가스감축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

- 탄소중립기반, 온실가스감축, 저탄소생태계조성 등 기후위기 예산을 합산하면 2024년 3조 8,027억 원 에서 2025년 3조 7,538억 원으로 약 489억 원 감액되었음

□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사업이 감액된 것은 인류가 겪고 있는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미

- 특히,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서 1177억 원, 재생에너지및에너지산업활성화에서 668억 원이 감소된 바, 1,845억 원 증액필요

③ 노동권: 청년·미래 대비 노동 예산 큰 폭 감액, 근로환경 취약 계층 위해 약 3,708억 원 증액

□ 고용·노동 부문 예산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육아휴직 제외 시 순감.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1,430억원), 내일배움카드(1,310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968억원) 등 청년·미래 대비 노동 예산 큰 폭 감액

- 부문은 이미, 24년도에도 24조원이 감액(국민취업지원제도 -2,83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810억원, 구직급여 -2,700억원)된 바 있으므로,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증액(약 3,708억 원)할 필요가 있음.

건강권·돌봄권 : 상병수당, 간병지원, 공공의료, 정신건강 지원을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위해 690억원 증액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50억 증액 필요

- (1단계 시범사업 유지 필요)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2025년부터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나,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초기 소득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적극적으로 최소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합하는 사업 설계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가기간을 현행 3월7일/14일에서 3일로 단축해야 함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70억 증액 필요

- 정부는 간병비부담 경감을 위해 '24.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나, 대상 환자가 의료최고도고도환자로 제한된 점 등으로 간병인력 및 간호인력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
- 이에 따라 간병인력 배치 확대 및 간호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나, 정부안에는 '25년은 6개월분 예산만 편성되어 오히려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상황

□ 지역거점병원 혁신 지원 사업, 310억 증액 필요

-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이후 환자이탈로 인한 병상 가동률 저하, 의료손실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현재까지 회복이 더딘 상태임
- 지난 몇 년간 공공병원 경영 악화 지속. 단기간 재정지원으로는 경영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워, 코로나19전인 팬데믹 전인 2019년 기준으로 기능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정신건강 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260억 증액 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건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호봉을 반영하고 수당을 편성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⑤ 교육권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원상복구 (약 9,386억원 증액)

희망사다리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 (약 45억원 증액)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원상복구, 약 9,386억원 증액

2019 도입되어 2021년 학년 전체로 확대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

- 3년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최근 교육위에서 특례 규정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됨

- 따로 증액 교부하는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9,386억원 증액 필요

나. 희망사다리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 약 45억원 증액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이 2024년 감액됨에 따라 신규 지원 4,759명에서 658명으로 수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어 지원 대상자의 학업 지속에 피해 발생

- 고등학교 졸업으로 사회 진출 후 학업을 재개하는 학습자에게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갑작스러운 지원대상 감소로 인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김
- 정부는 예산안 감액 기준을 2024년 예산안 책정 시 2022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2025년 예산안에서는 2023년 지원금액보다 낮은 51,794백만원으로 편성했기에 약 45억원 증액 필요

⑥ 디지털권 :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약 236억 증액

-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고 디지털을 보편권 수준으로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 필요
- 급격한 디지털 확산에 대응하여 고령층 등의 교육 확대, 지역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 정부의 디지털 리더십 정책 강화 필요
-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25년 정부안에 약236억원 추가 증액 필요

⑦ 문화권 :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맘 편히 창작할 수 있도록 약 659억원 증액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93.8억원 증액 필요

- 23년도 57,472백만원의 국고예산이 지원되던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24년도 50% 삭감된 28,736백만원 편성되고, 심지어 25년도는 8,087백만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이탈, 예술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23년 수준 국비 예산 편성 필요

□ 영화문화 다양성 회복을 위한 독립영화와 지역 영화 제작지원 30.9억원 증액 필요

- () 영화제 지원을 통한 영화문화 다양성 회복과 영화문화 저변 확대 및 한국영화 양극화 극복을 위해 23년(58억원) 대비 50% 삭감된 ‘국내외영화제’를 23년 수준으로 2,300백만원 증액 필요

- () 최대 독립영화제인 ‘서울독립영화제’는 한국영화 미래 인력 육성 발판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삭제된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사업 복원 및 296백만원 증액 필요
- (지역 영화) 영화 제작의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창작하는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 500백만원 증액하여 지자체와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차별화

예술인 창작환경 지원 및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134.3억원 증액 필요

-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한국문학 번역인력 양성 예산, 한국문학 번역출판지원, 인건비 처우개선 지원등 예산 6,184백만원 증액 필요
- (문학창작육성) 신진 문학 작가의 등용문 확장을 위해 1,252백만원 증액 필요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산 중 25년 예산안에서 감액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6,000백만원 복원

2	국민주권 - 영토주권수호를 위한 독도 관리 예산 조차 삭감한 尹 정부, 21억 원 증액 필요
---	--

□ 尹정부는 내년 독도 예산 조차 올해 보다 10% 가량 삭감

- 삭감된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사업(101억원→91억원)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조차 영토주권수호를 위한 주요시설 관리강화 및 국제사회 홍보강화를 위해 사업관리를 개선하고, 소관 부처도 지속 지원 필요 입장
- 이에 따라 23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5년 112억 원을 지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히려 25년 91억원으로 예산을 삭감된 바, 중기재정계획에 맞춰 21억 원 증액 필요

3	민생
---	----

비정당 정부, 에너지바우처 예산 삭감, 1,842억 예산 증액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1842억원(-26.9%) 삭감
- 에너지바우처는 부처요구안 5387억원보다도 삭감되었는데 특히, 동절기바우처 금액을 24년 6000억원에서 25년 41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삭감됨. 24년 수준인 1,842억원예산 증액 필요

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예산 삭감 : 약 5,000억원 이상 증액

- 중소기업관련 프로그램에 속한 모든 세부사업 중, 감액규모 또는 증액규모가 큰사업위주로 소팅하면 다음 표와 같음
-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된 세부사업은 소상공인지원업자 금융비용지원 사업이 3000억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사업이 1476억원 삭감되었음

<표 5> 중소기업관련 프로그램 주요 사업 변화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명	24년	25년안	25년안-24	증감률
중소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성장안전지원	비영리민간기업지원자금(융자) 금융비용 지원	300,000	0	-300,000	-100%
중소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성장안전지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458750	1311110	-147,640	-10.1%
일반회계	중소기업인력지원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23,339	19,347	-103,992	-84.3%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94,210	36,199	-58,011	-61.6%
일반회계	중소기업성장안전지원	신용보증기금출연	80,000	40,000	-40,000	-50.0%
지역특성발揚	지역중소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R&D)	46,787	8,150	-38,637	-82.6%
소재·부품·소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40,604	25,692	-14,912	-36.7%
일반회계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1,499	82,058	-9,441	-10.3%
중소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글로벌화지원플랫폼	40,261	32,141	-8,120	-20.2%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R&D)	12,394	4,675	-7,719	-62.3%
지역특성발揚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R&D)	6,653	0	-6,653	-100%
소재·부품·소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R&D)	10,389	4,069	-6,320	-60.8%
소재·부품·소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8,465	2,609	-5,856	-69.2%
일반회계	중소기업육성지원	마케팅지원사업	26,677	21,827	-4,850	-18.2%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기술공유형통합기술개발(R&D)	4,595	0	-4,595	-100%
소재·부품·소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R&D)	4,354	0	-4,354	-100%
지역특성발揚	지역중소기업육성	민간협력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사업	4,000	0	-4,000	-100%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R&D)	3,622	0	-3,622	-100%
일반회계	지역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관리 기반구축	3,295	0	-3,295	-100%
지역특성발揚	지역중소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R&D)	3,620	700	-2,920	-80.7%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디지털전환통합기술개발(R&D)	2,756	0	-2,756	-100%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R&D)	3,317	1,200	-2,117	-63.8%
중소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행정지원	중진기금기본경비	29,053	26,972	-2,081	-7.2%
소재·부품·소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R&D)	1,983	0	-1,983	-100%
일반회계	중소기업행정지원	국립마이스터고 인건비	35,324	33,648	-1,676	-4.7%
중소기업창업지원	중소기업행정지원	중진기금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640	4,027	-1,613	-28.6%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	6,900	5,836	-1,064	-15.4%
지역특성발揚	지역중소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R&D)	1,310	300	-1,010	-77.1%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R&D역량제고(R&D)	1,000	0	-1,000	-100%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명	24년	25년안	25년안-24	증감률
지역균형발달계	지역중소기업육성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9,918	8,926	-992	-10.0%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RD)	863	0	-863	-100%
일반회계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대중창업가력개발사업 및 동반성장사업	2,326	1,718	-608	-26.1%
지역균형발달계	지역중소기업육성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1,021	613	-408	-40.0%
일반회계	중소기업인력지원	마이스터고육성	25,426	25,068	-358	-1.4%
생략						